

# 보건복지 중장기 정책방향 및 연구계획

2004.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목 차

□ 보건의료연구실 중장기 계획 .....	1
▶ 보건정책분야 .....	7
▶ 보건자원 및 지식관리분야 .....	12
▶ 병원경영분야 .....	16
▶ 건강증진연구분야 .....	21
▶ 건강증진개발분야 .....	26
▶ 식품영양분야 .....	29
□ 사회보장연구실 중장기 계획 .....	33
▶ 건강보험분야 .....	36
▶ 연금보험분야 .....	42
▶ 기초보장분야 .....	48
▶ 자활지원분야 .....	52
□ 사회정책연구실 중장기 계획 .....	55
▶ 인구가족분야 .....	62
▶ 장애인복지분야 .....	69
▶ 노인복지분야 .....	75
□ 정보통계연구센터 중장기 계획 .....	83
▶ 전산개발분야 .....	85
▶ 통계개발분야 .....	88

# 보건의료연구실 중장기 계획

## 1. 현황과 문제점

### □ 고령화·저출산 시대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건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빈곤 노령층의 의료보장 기반 마련 필요성 대두
- 경제 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 욕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며, 각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
- 의료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라 제약, 유통, 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적인 많은 도전에 직면

### □ 질병 구조 다양화와 건강 위해 요인 증가

- 뇌혈관질환·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증가로 장기요양, 장기이식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
- 신종·재출현 전염병 등장 및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전염성 질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 조직 강화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필요
- 생활구조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건강 위해 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
- 산업화·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필요
- 의약품 및 식품 등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여건 및 유통체계 구축 미흡

###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취약

- 의료서비스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는 등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능 취약

- 취약계층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SARS 등 신종 전염병의 출현 등 국가적 비상 사태에 대비한 서비스 공급 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요구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거나 빈곤계층으로 전락 하는 경우에 대비한 지원책 미흡

#### □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비효율성

-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되는 등 보건문제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보건의료 체계는 치료 위주의 공급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효율적인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 수준은 미흡
- 스트레스관리, 통증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특수 전문진료 서비스 제공 미흡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간병기능 약화로 간병서비스, 낮병원, 치매요양서비스, 호스피스 등 의료 관련 부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미흡

#### □ 보건의료 자원 분포의 불균형

- 전체 병상 약 90%가 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며, 인력도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활동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지속
- 의료인력은 1999년 현재 도시지역에 94.0%가 집중되어 있어 도·농간 인구 분포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간 공급 불균형 현상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의 비율도 2002년 69.0%로 현저히 증가

#### □ 대외개방 및 통일에 대비한 대응방안 미흡

- 원격진료, 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의료 인력의 국가간 이동 등과 관련한 WTO/DDA 협상전략 개발과 의료서비스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 미흡
- 남북 교류 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일시적·구호적 지원의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

## 2. 정책방향

###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및 공공성 확대]

####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 효율적 공공모자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소 역할정립
- 의료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 강화
-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 군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교도소 수감자 등 사회취약층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교육 제공확대

###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1차 의료의 강화
-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

#### □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효율적인 배분 마련

- 보건의료인력 공급 적정화 및 질적 수준 제고
- 병상 공급 적정화 및 중소병원의 기능 전문화 유도
- 고가의료장비의 공급 적정화
- 신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미래 지식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지식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 근거중심의 의약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 신의료기술 인정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도모
  -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약제 적정성 평가 기준개발 및 적용을 통한 처방의 합리화
  - 의약품 및 신의료기술의 비용 효과성 평가를 통한 의약서비스의 합리화
  
- 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 및 부작용모니터링 제도의 강화
  - 우수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조·생산 및 유통 관리제도의 선진화
  - 의약품 안전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화
  
- 식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 위해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수입식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의 안전성 강화

## [건강생활 중심의 건강사회 기반 구축]

- 질병중심에서 건강위해요인 감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사회 기반 구축
  - 건강증진 목표 설정 및 전략개발
  - 건강증진사업과 첨단 정보기술과의 연계
  - 건강증진 통계 기반 구축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금연 및 건전음주문화의 정착
  
- 노년기의 건강관리 강화
  - 장기요양의료서비스나 재가서비스, 방문보건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

- 급여건을 구축하며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모델 제시
- 기존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탈피하여 건강생활실천 및 조기발견·조기치료 중심의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사업 강화

- 지역사회 정신보건 및 여성 건강증진체계 구축
  -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장기 방향 정립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 여성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 통일비용 절감을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준비
  - 북한 주민의 기본건강권 확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교류 및 협력의 확대
  - 남북한 주민의 대규모의 이동시 발생하는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통일비용절감을 위한 보건의료대책 수립 및 통일후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의 준비
- 대외개방에 따른 보건의료부문의 대응
  - WTO/뉴라운드 환경하에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해외진출 및 진입 촉진
  - 의료서비스부문 지역교역확대에 대비
  - 의료서비스시장의 대외경쟁력 강화

**3. 연구과제 및 우선순위**

- 보건의료연구실은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임.
-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연구
  -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 모자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정립 연구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연구
-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방안 연구
  -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공급 및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연구
  -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 미래 지식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 지식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 표준진료지침 개발 등 근거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조성방안 연구
  - 약제사용 적정성 및 신의료기술등의 경제성 평가 연구
  - 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 식품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 건강생활 중심의 건강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 국민건강증진 목표 설정 및 전략개발 연구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기적 수행을 통한 기초 건강수준자료 생산 연구
  - 금연 및 건전음주문화의 정착 방안 및 교육·홍보 자료 개발
  - 노인, 여성 및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 북한 주민의 기본건강권 확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
  - 대외개방에 따른 보건의료부문의 대응방안 연구



## 보건정책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경제·인구구조의 보건시스템 및 보건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고령화·저출산 시대에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의 중요성 부각
  - 교육과 함께 인적자본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보건에의 투자 필요성 증대
    - 보건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부문의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
    -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측정의 필요성 증대
  
- 보건의료제도 환경의 변화
  - 의약분업제도의 정착 필요성
  - 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대책 강구의 필요성 증대
  - 고령사회에서의 공적노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대
  - 적절한 보건의료인력 개발 및 양성의 필요성 증가
  
-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 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4.4%로 50~90%를 공공에서 지출하는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으며, 전체 병원의 8.3%, 병상수의 11.7%만이 공공으로 공급 면에서 민간에 크게 의존
  - 시설 및 인력에서의 낙후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낮은 서비스의 질
  - 노령인구의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증가 등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요구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공급자 조직의 분업화와 의료의 지역화 유도에 필수적 요소임.
  - 공공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미흡과 이에 따른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미비
-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진료현상의 심화
-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의 비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 확보 미흡
- 양한방 의료의 분리상태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진료비 가중
- 중소병원의 경영 부실 및 유희화로 인한 자원낭비 가중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관리 및 소비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

- 정보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부문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특히 강조되는 분야로서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수요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이 필요함.
- 신의료기술 등(신약 포함)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함.

□ 경제 전반적 환경변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성장동력 핵심분야인 보건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

- 전반적 경제흐름이 지식집약적,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령화 및 소득향상 등에 의한 폭발적 의료수요 확대, 세계화 및 WTO체제하의 시장개방 가속화 등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함.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및 성숙은 차세대 핵심기술응용(수요)산업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며(효율성 제고), '보건의료'라는 보편적 서비스의 형평적 분배를 위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개입 등 형평과 효율의 조화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의약품 사용과정의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 확보 필요성 증대

- 약제비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오히려 고가약 사용이 증가한 바 있음.
- 신약의 약가 결정과정 중 불합리·불투명한 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며, 의약품 가격

이 시장 가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양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고양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로 상호지역 방문에 따른 건강문제와 보건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 보건의료개발 및 기능복구를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됨.

- 그동안 대북사업은 반복적인 일시적·구호적 지원의 형태로 인하여 보건의료기반 복구 및 개발지원을 위한 상호 인적교류 및 협력단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보건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부재함.

## 2. 정책방향

□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 공공보건의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
- 충분한 예산 확보
-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전제로 함.
- 시설투자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공급방식뿐만 아니라 재정기전과 수가를 통한 유인도 동시에 고려함.
-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분야: 응급의료, 예방과 교육이 강조되는 만성병 관리, 전염병관리, 영유아보건, 모성보건, 정신보건,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체계구축

□ 보건의료부문의 질 보장 및 성과 평가

- 불필요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규제 철폐 및 규제 대체수단(규제완화 인프라) 마련
- 의약분업제도 등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성과 평가
- 신의료기술 평가, 약물경제성 평가 등 미시적 성과 평가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 및 평가 활성화
- 주요 예산사업의 성과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

- 일차의료기능의 강화
-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 및 차별화
-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
-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전략 모색 및 기술지향적 산업정책 마련

- 보건의료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 및 기술무역통계 체계화
- 산업부문별 기술혁신전략 연구 및 기술경쟁력 평가
- 보건혁신체제 구축

□ 의약품의 안전성·비용효과성·접근용이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 및 생산관리체계 구축
- 의약품 유통체계의 분석 및 효율화
-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약제 적정성 평가
- 보험의약품의 약가 및 등재관리 합리화를 통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 소비자 및 의사, 약사에 대한 의약품 정보제공 효율화

□ 북한 보건의료개발 및 기능복구를 위한 정책 마련

- 북한 보건의료인력 및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체계 구축
- 북한 보건의료의 개발지원 및 회복지원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접근방식의 사업모형 개발
-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제도 정비 및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b>					
- 지역별, 기능별 수급균형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예방, 만성병, 장기요양, 응급, 건강증진 등)	○	○	○	○	○
-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		○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 방안					○
- 공공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및 활용 방안			○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방안		○			
<b>2.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b>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		
- 일차의료기능의 강화	○				
- 의료기관 기능 차별화 및 특성화 연구		○			
-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평가 활성화		○	○		○
-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	○
- 양한방 통합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b>3. 보건의료부문의 성과 평가</b>					
-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	○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및 규제완화 인프라 마련		○		○	
- 주요 예산사업의 성과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		○		○
- 의약분업제도 등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성과 평가		○			○
- 신의료기술 평가, 약물경제성 평가 등 미시적 성과 평가	○			○	
<b>4.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전략 모색 및 기술지향적 산업정책</b>					
- 기업환경에 적합한 성장전략 도출 • 한방산업의 벤처화 방안 • 바이오 의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	○		○
- 수출촉진과 수입대체 방안 강구 및 대외 경쟁력 강화방안	○	○			
- 시장지향적 기술개발전략 및 기술지향적 산업정책 마련 • 보건산업부문별 기술혁신 전략연구 • 보건산업의 지식자산추계에 관한 연구	○	○	○	○	○
<b>5.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및 안전확보 방안</b>					
-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허가생산체계 구축방안	○		○		
-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약품 사용 합리화 방안: 제네릭 및 주사제 등					○
- 보험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			
- 약국의 약제서비스 제공실태와 질향상 방안				○	
<b>6. 보건의료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증진 및 발전방안 연구</b>					
-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증진방안	○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실태 및 관리방안		○			
- 남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장단기 계획			○		
- 북한 일차보건의료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	
-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교류 협력사업 확충방안					○
- 개성공단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

## 1. 현황과 문제점

-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과 균형적 배치, 질관리 등은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행조건임.
-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사회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은 보건의료자원의 새로운 중요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기폭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양질의 자원을 적정 공급하기 위한 기반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인구의 고령화, 대외개방 및 보건의료과학기술의 발달은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을 야기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관리방안마련을 필요로 함.
  -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활환자의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쓰이는 고가의료장비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원활용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은 수급에 필요한 관련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계획수립의 어려움이 있으며, WTO 체제 출범 등으로 국가간 인력의 이동이 가능해짐.
- 미래 지식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의 투영이 충분치 못하여 보건의료지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영역개발이 부진함.
  - 관련정보와 지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발전적인 시장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

## 2. 정책방향

-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자원을 적정 공급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비용 효과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 미래 지식사회에 대비한 보건의료지식관리 및 e-보건의료체계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모델을 개발함.

## 3. 연구과제

### □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적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공급량과 분포를 적정화하고 공급체계 및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의 양과 질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인력자원을 개발·제공함.

### □ 고가의료장비

- 단기적인 정책방향
  - 고가의료장비 공급과잉과 비효율적인 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가의료장비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
  - 고가의료장비를 통한 검사결과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허용하고 이를 보험급여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및 품질관리강화
- 장기적인 정책방향
  - 현행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와 같은 사후적 보상체계보다는 총액예산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정부가 의료장비의 적정수준을 부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강제하기보다는 각 병원이 비용절감동기를 가지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해야 함.

#### □ 장기요양서비스

- 만성 및 노인 또는 아급성 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수요에 적합한 요양병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으로의 신설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의 중소병원의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기존 병상수가 충분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상의 일부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의 정비, 요양병원 자원 확충, 수가체계의 개선 및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을 하여야 할 것임.

#### □ 보건의료지식관리 및 e-보건의료체계

- e-보건의료서비스(e-Health) 현황분석 및 전망에 따라 새로운 e-Health 모형을 개발함.
- e-Health 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을 마련함.
- 보건의료지식에 대한 소비자필요 및 요구도를 조사함.
- 보건의료지식의 수집, 배분, 유통 및 활용방안을 마련함.
- 보건의료지식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
- 보건의료지식에 대한 보안 및 윤리성을 검토하고 지침 등을 마련함.



#### 4.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 및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b>					
1)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방안 - 1차 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수탁추진) - 보건의료인력의 보수교육 개선방안 - 전문의 수급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약사)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의료기사 수급현황과 정책과제	○	○ ○			○ ○ ○
2) 보건의료 시설 및 장비의 적정수급방안 - 개방형 병원제도 확대방안 연구 - 집단개원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 수탁검사시설의 수급현황과 활성화방안 - 응급의료체계평가와 개선방안 - 고가의료장비수급계획에 관한 연구 - 병상수급추계와 적정성에 관한 연구			○	○	○ ○ ○
3)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분포 및 효율성 증진 방안 -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공급량 및 분포의 적정화방안 - 보건의료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 - 의료수요 및 공급에 관한 연구	○				○ ○
<b>2. 보건의료지식관리 및 e-보건의료체계 정립</b>					
1) e-Health 현황분석 및 전망 - e-Health 시장 실태조사 - e-Health 모형개발 및 추진방안 2) e-소비자행태분석 및 서비스개발 - e-소비자필요 및 요구도 조사 3) 보건의료지식의 수집, 배분, 유통 및 활용방안 4) 보건의료지식의 보안 및 윤리	○	○ ○	○ ○ ○	○	○ ○ ○ ○

## 병원경영분야

### 1. 현황

#### [고급 의료의 수요증대와 질적 수준의 미흡]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따라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욕구는 오히려 날로 증가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병원의 중요성 증대
- 그러나 의료보험의 양적 확대정책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수준은 크게 미흡하여 의료이용자와 의료공급자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병원의 서비스 환경이 열악한 데 대한 의료이용자의 불만이 상존
  - 현행 의료보험수가 체계에서는 적정진료가 어려워 진료왜곡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국민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의료공급자의 불만 팽배

#### [병원의 역할·기능의 구분 불명확함에서 오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증대]

-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전체 의료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의료자원의 낭비, 즉, 의료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와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원, 그리고 퇴원후 또는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재가의료, 요양시설의 효율적 연계체계의 중심축으로서 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음.

#### [보건의료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요인 발생]

- 의약분업의 실시, DRG제도의 확대실시, 의료보험약가의 실거래가 보상제도 실시 등

으로 급격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겪게 되어 병원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 2. 문제점 및 과제도출

### □ 의료전달체계 왜곡 원인 또는 장애요인 파악 미흡

- 병원은 1차의료가 담당하지 못하는 서비스영역(2차, 3차 외래진료; 입원진료)을 맡아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고급 의료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원이 담당해야 할 1차의료를 상당부분 공급하고 있음.
- 병원이 1차의료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경영개선을 위한 병원의 자구노력, 양질의 고급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병원선호,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비효과적 운용의 결과라고 요약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 그리고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재가의료 및 요양시설의 효율적 연계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도출과제]

- 외래환자의 병원선호도분석 및 정책과제
-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의 질 개선방안 연구

### □ 의료전달체계 내 병원의 기능·역할 정립방안 미흡

- 인구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보건소와 의원, 그리고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재가의료 및 요양시설의 효율적 연계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도출과제]

-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인 병원의 기능 정립방안 연구

□ 병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미흡

- 병원 경영수지악화의 원인이 수가의 부적정성 때문인지, 또는 비효율적·비전문적 경영 때문인지, 기능 및 역할분담을 유도하지 않는 의료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과도한 규제 때문인지, 그리고 병원의 공급과잉 때문인지를 분석·검토
  - 기초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병원 내부경영수지자료를 활용한 병원경영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병원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비효율적·비전문적 경영 능력, 비합리적 의료보험수가체계, 또는 공급과잉의 문제 때문인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건의
    - 또한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는 민간병원이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을 때 정책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

[도출과제]

- 각 연도 병원경영통계분석
- 병원원가요인분석을 통한 병원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DRG제도가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합리적 노사관계정립을 통한 병원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개방화에 대비한 병원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방안
- 중소병원의 전문화방안 연구
- 개방형 병원제도 평가 및 확대방안 연구
- 병원부문 정부규제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 전공의 및 전문의 적정 임금 추정 연구
- 의약분업이후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

□ 공공병원의 역할 정립방안 미흡

- 공공부문의 역할정립 및 병원경영과 수가산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육성방안 검토
  -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의료서비스의 10~15% 정도만을 담당하여 공공의 역할이 매우 미흡함.

- 공공병원을 규모별·종별로 일정수준까지 늘리고 책임경영(agency)화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
- 민간병원의 내부자료는 확보도 어렵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공병원의 투명하고도 신뢰성 있는 경영결과를 활용하여 정책대안 제시

#### [도출과제]

- 각 연도 공공병원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기초과제)
- 공공 및 민간병원의 역할 분담방안 연구

####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출 미흡

- 현재 1차 의료 외래환자가 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혹시 병원은 소비자의 병원선호성향을 악용하여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를 검토
  -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가격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수가에 비해서 낮은가를 분석하여 서비스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현재의 수가수준이라도 병원이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시스템개발

#### [도출과제]

-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연구
-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임평가 연구
-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방안 연구
-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수련병원간 전공의 배정을 위한 전공의 적정 수 추정 연구

### 3. 정책방향

-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따라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 욕구의 충족

- 노인인구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병원서비스와 의원, 재가의료, 치매·요양, 건강상담의 기능분담과 효과적·효율적 연계체계 구축
- 보건의료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한 국내병원산업의 경쟁력 강화
- 의약분업실시, 의료보험지불보상제도 변화 등에 따른 병원경영개선 방안 마련으로 병원서비스 공급차질을 방지

#### 4.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인 병원의 기능정립방안 연구</b>					
1) 외래환자의 병원선호도 분석 및 정책과제		○			
2) 중소병원 전문화 방안 연구			○		
3) 개방형 병원제도 평가 및 확대방안 연구		○			
<b>2. 병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b>					
1) 각 연도 병원경영통계분석	○	○	○	○	○
2) 병원원가요인분석을 통한 병원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연구	○				
3) DRG제도가 병원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분석			○		
4)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병원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	
5) 개방화에 대비한 병원산업의 구조조정 유도방안		○			
6) 의약분업 이후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	○		○		○
7) 병원부문 정부규제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
8) 전공의 및 전문의 적정 임금 추정 연구		○			
<b>3.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b>					
1) 의료기관서비스평가사업(공동연구)	○	○	○	○	○
2) 수련병원실태조사 및 병원신입평가 사업(공동)	○	○	○	○	○
3)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진료정보 활용방안				○	
4)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	○	○	○	○
5) 수련병원간 전공의 적정 수 추정 연구(공동)	○	○	○	○	○
<b>4. 공공병원의 역할정립 및 육성방안</b>					
1) 각 연도 공공병원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공동)	○	○	○	○	○
2)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 분담방안 연구			○		

## 1. 현황과 문제점

-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노령인구의 만성유병률이 증가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건강증진'은 만성질환의 관리적 특성을 고려,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법·제도·공공정책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건강 친화적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효과적 접근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의 가장 '가치있는 투자'로 강조되고 있음.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사업이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여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실정임.
- 산업화 및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속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와 지역사회의 통합력이 급격히 와해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담이 사회로 표출되어 국가적 부담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사업의 사업 우선순위가 아주 낮은 실정임.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의료수가체계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장기입원 및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의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금까지 모자보건사업은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단일보건사업의 성격으로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 역점을 두었으나 최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대상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모자보건 문제가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서 사회·복지·교육·환경 부문 등에서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포괄적인 생식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생산체계가 미흡함.
- 저출산(2002년 합계출산율 1.17) 시대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전한 성장발달 등 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요구가 증가되고 출생아의 질병과 사망양상도 저체중 및 선천성 이상에 관련되나 이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지지체계가 미흡함.

□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 및 이에 따른 건강위해 요소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질병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는 미흡함.

- 경제발전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암,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증가나 관리체계의 구축이 미흡함.
- 결핵 및 성병 등 박멸되지 않고 있는 전염병은 물론 AIDS 등의 신종 전염병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2. 정책방향

□ 건강증진 연구의 목표는 '긍정적 건강'(positive health)의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건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연구·지원하는 데 있음.

□ 이론 연구는 과거 질병중심의 의학적 모델에 근간을 두고 있는 현대의학의 이론적 관점으로부터 건강증진개념체계로의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연구로서 국민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건강증진사업 촉진 및 이론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포함됨.

-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의 수요에 따른 공공모자보건사업 수행체계의 구축과 모자보건 관련 데이터 생산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특히 영아사망통계와 모성사망통계를 통합하여 생산해 내는 생정통계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함. 또한 공공모자보건사업 영역을 임신부 및 영유아에서 향후 모성이 될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장년기 여성으로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생식보건과 주산기 관리로 확대하여 기존의 모자보건사업 체계를 생식보건사업체계로 재편함.
-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국가적 대응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체계를 구축함.
- 급격히 증가하는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함. 이를 위하여 저평가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보건의료부분의 투자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며, 이에 따라 미비된 공공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 및 정책개발을 추진함.
- 혈액 및 뇌사자관리방안,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함.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건강증진사업체계 구축</b>					
1) 국민건강·영양조사 설계			○		
2)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			○	
3)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분석		○			○
4) 건강위험행동 감시체계 구축 연구		○	○	○	○
5) 청소년의 건강위험요인 규명 및 건강증진사업체계 연구		○	○		○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 연구		○	○	○	○
7) 건강행태의 요인분석에 따른 종합적 건강증진모형 개발 연구		○			
<b>2. 모자보건사업체계 구축</b>					
1) 전국영아·모성사망조사(사망 수준 및 사인분석)	○	○		○	○
2) 영아 및 주산기 사망의 위험요인 분석			○		
3) 미숙아·저출생체중아 발생 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			○	○	
4) 불임, 다태임신, 제왕절개 실태조사			○	○	
5) 모성 및 태아건강 D/B 구축	○	○	○	○	○
6) 보건소의 여성/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평가	○	○	○	○	○
7) 지역 모자보건 및 의료, 복지 협조체계 구축 방안		○			
8) 영유아기의 건강위해 요인 파악과 효과적 관리방안					○
<b>3. 노인보건사업체계 구축</b>					
1) 허약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2) 허약노인의 장기요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모형 개발		○			
3) 노인의료비 구조분석과 정책대응방안			○		
4) 만성질환노인의 질병부담분석 및 정책대응방안				○	
5) 저소득노인의 의료·장기요양보장 욕구분석과 대응방안					○
6) 노인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			
7) 노인 건강 결정 요인 연구			○		
8) 퇴직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9) 노인보건정책의 평가					○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4. 공공 정신보건사업체계 구축</b>					
1) 국가 정신보건정책 평가 및 전략개발	○				○
2)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연구	○	○		○	○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	○	○	○	○
4) 정신질환 사회적 부담연구			○		
<b>5. 질병관리체계 개선연구</b>					
1) 혈액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체계모형개발	○				
2) 뇌사자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	○	○		
3)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추이와 관련 요인 규명 및 증가 억제 대책			○		
4)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요인 규명과 영양감시체계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방안	○	○	○	○	
5)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	○	○	○	○
<b>6. 여성건강관리체계 구축</b>					
1) 보건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	○	○	○	○
2) 여성건강지표 개발 및 산출체계 구축 방안 연구	○			○	
3) 여성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연구		○			○

##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의 건강욕구증대와 상병양상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건강관리가 아니라 상병발생이전에 국민들 스스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적극적인 보건교육사업 지원이 요구됨. 이에 따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었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위해 보건교육 활동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보건교육 지원 전담기구인 「보건교육개발센터」를 1998년 7월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 설치·운영함.
-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 또한 미흡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건강증진사업 관리자 및 실무담당자들이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국민들의 개인건강의식 개선이나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형편임.
- 국민보건교육의 개선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증진/보건교육 홍보활동을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중앙단위의 전담기구인 건강증진개발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함.
  - － 국민건강증진사업실시에 필요한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보관리, 보건교육홍보매체 및 자료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사업개발 및 평가 등 기술적 지원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책방향

- 국민건강증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건강증진 홍보매체의 개발보급, 자료의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훈련, 사업개발·평가 등의 기술적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함.
- 보건교육 홍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과 자료의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교육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함.
- 수집된 건강증진 자료를 분석·가공하여, 보건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구축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와 보건교육자료를 관리하는 건강증진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3. 연구과제

### 교육홍보

- 생애주기별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보건교육자료의 분석 및 효과 평가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장단기 계획 수립
- 홍보매체 등을 위한 효율적 교육홍보 방안
-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교육 등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실시 와 관련된 기술지원

### 정보관리

- 건강증진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구축
- 건강증진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강증진 자료은행(data bank) 운영 및 관리
- 건강증진 정보 공동활용방안 연구
- 건강증진 정보 질 관리방안 연구

#### 4.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1. 보건교육자료의 평가		○		○	
2.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자료개발	○	○	○	○	○
3. 국민건강증진 장단기 계획 수립	○				
4. 이 달의 금연길라잡이(전국 건강캠페인)	○	○	○	○	○
5. 보건의료기관, 특수기관중심 교육자료개발		○			
6.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
7. 금연포털사이트 운영 구축 및 운영	○	○	○	○	○
8.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
9. 건강정보 공동활용 방안 연구		○			
10.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수용성	○	○			
11. 인터넷 건강정보 질관리 방안		○			

## 1. 현황과 문제점

- 과거 생산자 중심의 식품육성 개념이 1995년 WTO 출범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품교역의 자유화, 개방화에 의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전통적인 식품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해마다 식품수입량이 증가하여 현재 103여 개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식품의 열량의존도도 5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수준의 제고가 국가차원의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 2004년 1월 대통령의 식약청 방문시 향후 우리나라 식품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누어 소비자 안전보호 중심의 정책과 법령 수립,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가칭 『식품안전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요구한 실정임.
- 식품안전이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최근 BSE 발생, 육류의 다이옥신 오염, 식품의 중금속 오염 증가 등 식품문제가 국제 문제화하자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조직체계를 통합화, 일원화하는 관리조직체계의 전환을 추진, 완성하고 있는 실정임.
  - 영국, 캐나다 등은 『식품검사청』 등을 신설하여 일관성있고, 신속한 식품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CFDA』,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를 각각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식품안전에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조직의 개선을 위하여 2003년 8월 국무조정실내 TFT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하던 식품안전사업은 최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위해분석(Risk Analysis)개념을 근간으로 위해평가, 위해전달, 위해관리의 과학적인 개념하에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위해분석적인 식품안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으로는 부족하여 위해분석에 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및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가칭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됨.
  - 또한 식품안전 행정조직체계 및 인력수급도 위해평가, 위해전달, 위해관리의 전문적이고 기능적 분류에 의거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위해 분석업무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 등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추구하는데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적인 전환과 함께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및 정부조직 감량 등 내적 환경변화와 식품교역의 개방화 등 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증가되는 식품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전환이 또한 필요함. Positive system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업무의 전문화와 식품업계의 자율성 및 책임 확대 등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아직은 답보상태임.
-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 제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980년 이후 등장한 규제정책의 합리화가 필요함. 즉,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경제규제의 완화와 식품, 환경 등 사회규제의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나 국가차원의 총량적인 규제완화 정책차원에서 식품분야 규제정책이 일방적으로 완화되고 있어 식품안전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기존 존치규제도 식품산업의 육성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령지시적 사전규제에서 시장유인적 사후규제로의 성격 전환이 필요함.
- 식품안전과 더불어 과거 주로 영양결핍에서 현재 영양결핍과 영양과잉이 상존하는 영양불균형이 문제시되고 있는 영양분야도 건강증진 및 사전예방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한 영양정책의 수립, 집행 및 관련 조직의 효율화가 요구됨.



## 2. 정책방향

- 식품영양연구의 목표는 ‘식품안전’(Food Safety) 수준의 제고에 의한 안전한 식품섭취와 균형잡힌 영양섭취(Balanced diet)로 인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연구, 지원하는 데 있음.
-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련 행정조직의 통합화를 심층 검토하며, 실제 식품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하부조직의 기능적 전환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식품안전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및 사전예방적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식품환경 수요에 따른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식품별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바 증가일로에 있는 수입식품, 최근 시장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여전히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등에 관한 관리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함.
- 수입식품, 국내 생산식품의 양적, 질적 증가에 의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항목의 연차별 개정안과 유통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Cold-Chain system 구축 등 기술적 연구와 분야별 식품규제 정책의 합리화에 의한 제도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함.
-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위해분석 개념을 조기 정착시키며, 모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평가, 위해전달, 위해관리 차원에서 기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정책개발을 추진함.
-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영양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양관리조직, 영양정책, 영양교육 등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함.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식품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b>					
1) 수입식품 검사체계의 개선		○			
2) 건강기능성식품의 관리체계 개선 방안	○			○	
3) 식품의 잔류농약 저감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			○
4)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Cold-Chain 구축 현황과 확대 적용 방안			○		
5) GMO에 관한 적정 홍보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			
<b>2.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b>					
1)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 방안	○				
2) 식품검사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개발		○			
3)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연구			○		
4) 식품안전관리체계의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			○
5) 위해분석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		
6) 식중독 저감화를 위한 감시체계 선진화 연구				○	
<b>3. 식품안전관리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b>					
1) 식품규제정책의 합리화 방안	○	○			○
2) 식품안전감시수준 제고를 위한 거점감시망 구축		○			
3) 식품검사항목의 연차적 개정 방안 연구			○	○	
4) 식품오염물질의 섭취 현황 분석과 대응방안		○		○	
5) HACCP의 의무적용에 따른 평가 연구			○		○
6) 학교급식의 지원 및 평가 연구		○		○	
<b>4. 국민영양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b>					
1) 식품안전과 연계된 영양정책의 적정성 연구	○			○	
2) 영양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편방안 연구	○	○			
3)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감시체계 구축			○		
4) 탈 보건소 지향적인 국가영양관리체계 구축		○			
5) IT 중심의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

# 사회보장연구실 중장기 계획

## 1. 현황과 문제점

### □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

-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 비정규직의 증대와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 급속한 정보화 등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복지수요가 격증될 전망
  - 시장기능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는 지속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문제가 심화될 것임.
- 지방분권화의 진전은 지역별로 특성화된 복지정책의 수립과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

###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필요성 고조

- 전국민연금시대의 돌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및 건강보험의 조직통합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외형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사각지대해소, 재정건실화,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같은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
  - 국민연금은 도시지역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으며, 급여부담구조의 불균형으로 재정불안문제가 내재되어 있음.
  - 국고지원의 일시적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해소되었으나 국고지원의 종료, 보험급여율 확대 등 새로운 재정불안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
  -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고용구조의 변화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차상위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간 연계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초소득보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됨.
  - 사회보장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 및 자료 연계의 강화 필요

## 2. 정책방향

### □ 참여복지체계 구축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두된 빈부격차 심화문제, 고령화·정보화·세계화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개인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선진화 및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 확대
  -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 중산층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공급 주체의 다원화 및 공사역할분담의 정립
  - 국민이 복지수요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급자로서 재원형성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 □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 전국민 대상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책을 구축하여 연금 사각지대 해소
  -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기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의 연계를 통해 의료보장의 틀을 체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달성
  - 4대 사회보험제도간 정보연계 및 자료연계 강화를 통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에 의해 야기되는 수급관련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사회보장체계 재정의 안정적 운영 강구
  - 국민연금 부담-급여구조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재정건실화 확립
  - 건강보험 재정건실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직역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3. 연구과제 및 우선순위

#### □ 기초연구

- 빈곤관련 통계 생산의 정례화
- 연금재정재계산 모형 개발
-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조개편방안

#### □ 사회보장체계의 성숙을 위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를 포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대상자관리의 과학화
- 노후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있어 공사역할분담 방안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부과체계 합리화 방안
- 사회보험 부담에 있어서 피용자/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방안
- 사회보장제도간의 역할정립을 위한 연구

#### □ 사회보장재정안정 달성을 위한 연구

- 적정기초보장 재정규모 설정
- 연금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및 기금운용 평가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재정의 장기안정화 모형 개발
- 질병예방적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보험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 낙관하기 어려운 보험재정

-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가 2003년에 이어 금년에도 1조 3700억원의 당기흑자가 예상되어 누적적자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재정정상화 목표연도인 2006년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재의 재정흑자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재정을 위협할 것임.
  - 진료비의 후불보상으로 진료비통제 메커니즘의 취약
  - 노인의료비 급증(65+인구비중: '04년 8.7% → '08년 10.1%)
  - 의료인력공급 증가(면허의사수: '04년 8만 4천명 → '08년 9만 8천명)와 의료수요 창출 효과
-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게 되고, 의료공급자들의 수가 인상 압력이 가중될 때에 재정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 건강보험 사각지대

- 현재의 보험재정의 흑자기조는 재정위기 당시에 제정된 건강보험재정특별법에 의한 한시적인 국고지원 확대(2006년까지)에 힘입어 달성된 것임.
  - 한시적 국고지원: 지역건강보험재정의 50% 국고지원(40%는 일반예산, 10%는 담배부담금)
- 따라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건강보험급여율을 2008년까지 70%수준까지 확대할 경우 재원조달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함.
  -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이해집단간에 의견이 다름.
-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 7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보험료인상으로 체납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각 지대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 현재 지역보험료체납(3개월 이상)이 150만세대로서 전체세대의 14%에 해당

#### □ 직장과 지역간 형평문제 재연 가능성

- 건강보험통합이 2000년 7월 조직통합, 2003년 7월 재정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정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직장과 지역간 부담의 배분에 따른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
  - 재정통합하에서 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적자분을 직장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이르면 직장가입자의 저항이 예상됨.
  - 직장가입자의 저항을 완화하려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하나, 예산당국의 반대 등 상당한 정치적 난관이 예상됨.

## 2. 정책방향

- 국민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정착
-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사회적 합의 구축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험혜택의 실질적 보장성 확보
- 건강보험통합에 따른 비용효과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제고

## 3. 연구과제

### 가. 단기과제

#### □ 지속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진료비 목표관리

-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부담가능한 정도(sustainable growth rate)의 진료비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수가수준(환산지수)<sup>1)</sup>을

조정함. 이와 함께 '수가-보험급여-보험료-국고부담금'을 동시에 결정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함.

□ 보험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확보방안 마련

- 중증질환과 같은 고액진료비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진료부문에 대한 보험급여범위를 확충
  -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빈곤층의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획기적 확충 필요
    - ※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금상한제(6개월간 300만원 상한)는 비보험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
- 소요재원은 감기와 같은 다빈도의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소폭 인상으로 조달 가능함.

□ 건강보험통합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

- 기능의 재조정: 보험료 징수와 진료비지불 기능에 주로 한정된 기능을 국민에 대한 건강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
  - 보험료징수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 (4대 사회보험의 징수기능 통합과 함께 고려)
-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거대 단일공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쟁적 유인을 도입 → 지사별로 목표수입 달성률, 진료비 절감 성과 등 관리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 건강보험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 전자(IC)카드 도입을 통하여 가입자들의 부정한 의료이용을 통제하고 공급자들의 허위부당청구를 제어하도록 함.
    - ※ 대만은 2003년에 스마트카드 도입, 프랑스와 독일도 시행중

---

1)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의 보상단위는 제공한 의료행위별 '점수'로 산정되고, 해당 점수에 점당 단가(즉, 환산지수)를 곱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



- 이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 등 의료비의 투명한 관리도 가능함.

## 나. 중장기 과제

### □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

- 2008년 보험급여율 70% 확보는 보험료의 획기적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입원진료와 같은 고액진료 영역에서의 환자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는 실질적인 보장성 확보로 정책방향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검토

-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정부(보험자)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기준에 합당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취급기관으로 계약함.

### □ 통합시스템의 비용효과적 관리

- 거대한 단일공단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쟁 시스템 도입; 지사별로 목표수입 달성률, 진료비 절감 성과 등 관리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e-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 건강보험 관리의 전산화로 관리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리인력의 전문화를 강화하도록 함.
- 국민의료비의 투명한 관리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4.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b>					
1) 보험급여구조의 재편성	○	○			
2) 목표진료비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조정방안	○	○	○		
3)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효율적 운영방안	○	○			
4) 국고지원의 적정규모와 효과적 지원방안	○	○			
5) 의약분업에 의한 진료비 증가유인 대처방안		○			
6)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 억제방안			○	○	
7)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행태 건전화 방안				○	○
8)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조개편방안		○	○		
<b>2. 부담의 형평성: 재원조달·보험료부과의 형평</b>					
1) 보험료부담과 급여의 형평성 분석	○			○	
2)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	○			
3) 재원조달방식개선방안(조세방식검토)			○	○	○
<b>3. 위험분산 강화: 보험급여·본인부담의 적정수준</b>					
1) 고액진료 환자의 긴급의료안전망 구축방안		○			
2)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 연계통합방안		○			
3) 보험료체납계층(사각지대)의 해소방안	○	○			
4) 건강보험 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운영방안		○	○	○	
5)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안		○	○		
6) 소득계층별 환자본인부담금 조정방안				○	
7)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급여체계의 개편방안			○		○
8) 의학기술혁신과 정보화에 따른 보험급여체계 개편방안		○		○	
<b>4. 보험수가·지불제도(심사·평가)</b>					
1)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한 진료적정성 평가시스템 구축		○	○		
2) 진료영역별 지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	○	○		
3)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	○	○		○
4) 상대가치 재평가	○	○			
5) DRG 수가의 구조조정	○	○			
6) 보험수가수준의 국제비교		○			○
7) 의료기술 변화와 수가구조조정 방안		○	○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5. 관리운영의 효율화</b>					
1) 건강보험공단·심평원의 역할 정립방안	○	○			
2)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		○
3) 통합내 경쟁시스템 도입방안		○	○		
4) 정보화사회 도래에 따른 건강보험 관리의 혁신방안			○		
<b>6.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연계발전</b>					
1) 의료수요자·공급자·보험자간 통합의료재정관리모형 개발		○	○		
2) 의료자원 적정배분과 건강보험 역할				○	
3) 진료체계 정상화와 건강보험의 역할		○			
4) 의료사고보험제도 도입방안			○		
5) 의료기관 경영합리화와 건강보험역할				○	
6) 의료체계 선진화와 건강보험의 역할					○
<b>7.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개혁동향 연구</b>					
1)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혁동향			○		
2) 장기요양 및 재택(가정간호) 의료서비스의 동향		○		○	
3)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동향	○	○			○
4) 진료비 억제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동향		○	○		
5) 의료보장제도의 관리 및 재정 운영방식의 개혁동향	○			○	
<b>8.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b>					
1) 사회보험 관리효율화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방안		○	○		
2) 사회보험 자격 및 징수관리 기능의 연계 및 통합방안		○			
3) 사회보험 관리조직의 구조개편방안			○		
4)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방안				○	

## 연금보험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 연금의 사각지대 상존

-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1992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 1995년 농어민 및 군지역 거주 자영업자, 1999년 도시지역자영자에 확대 적용되어 이른바 「전국민연금」 시대가 개막되었음.
- 제도의 적용측면에서는 「전국민연금시대」에 돌입하였으나 도시지역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납부예외자로 상존하고 있음.
  - 장기간 납부예외자로 남게 될 경우,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노후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특수지역연금 가입대상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에게는 일시금 수급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일시금 수급자는 노령 후반기에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안정

- 지역가입자 소득과약 능력의 한계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40% 이상이 중위소득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 연금재정 불안정

- 국민연금과 공적직역연금 모두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총급여액이 총기여액을 초과하는 「저부담 - 고급여」구조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에 1988년부터 30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기여에 비해 2.3배의 연금급여를 받게 됨.
- 현행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연금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

어 지속가능한 연금의 구현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국민연금은 현재 법에 정하여진 보험료율에 따를 경우, 2036년에 당해연도 적자가 발생하여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 또한 실제소득이 아닌 공단직원과 지역가입자간 타협에 의한 소득등급 결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확한 소득과약의 부재속에 무리한 징수를 강행하여 국민들의 연금제도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음.

#### □ 공적연금과 사적 소득보장수단의 연계 미흡

- 최근 선진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으며 기업연금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국민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60%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9%에서 17.4%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법정 퇴직금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직장 이동시 연계가 되지 않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연금도 일정기간 불입을 못할 경우 의지해지되며 5년 이상 불입후 해약시 해약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함.

#### □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적연금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2004년 2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조성액은 135조원이며 연금급여 등으로 18조원을 지출하고 운용기금은 115조원임.
-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10년에는 3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999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운용본부」가 신설되었으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수정적립방식하의 국민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방대한 적립기

금이 누적되며 이 적립기금의 운용은 국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됨.

- 적립기금액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기금운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전무한 실정임.
-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실적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특수직역연금제도 개선

- 특수직역연금은 동일한 「부담 -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연금선택률, 도입시점의 차이 등으로 재정상태가 상이함.
- 재정불안정이 심각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급여지급의 상당부분을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타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된 사학연금 역시 현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2019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됨.
- 특수직역연금 재정불안정은 보험료 부담수준 대비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저부담·고급여」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역 연금은 퇴직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음.
- 조기퇴직에 따른 수급기간 장기화도 연금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 정책방향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를 달성함으로써 가족내 노인 부양기능 약화에 대처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대비하여 「저부담-고급여」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 확립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연금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사회보장기능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 도모
- 효율적 기금운용을 통하여 연금재정 건실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
- 특수지역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재정건실도를 제고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 3. 연구과제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연금화 달성
  -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납부예외자 소득신고 유인
  - 여성 연금수급권 보장
  - 기초연금 도입 검토
  - 최저 보증연금제도 도입 검토
  -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산입제 도입 검토
- 연금재정 안정화
  - 재정재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 공적연금 보험료부담·급여수준 적정화
  - 소득비례연금에 명목확정각출(NDC)제도 도입 검토
  - 연금 재정추계기능의 확충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과 공·사연금간 노후소득보장 역할분담
  - 퇴직금의 기업연금화
  -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 검토

-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확충

- 연금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
- 국민연금 기금운용 효율성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확립
-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조직의 효율성 제고

-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선

- 특수직역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 특수직역연금의 다층소득보장체계 개편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연계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연금화 달성</b>					
1)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평가 및 정착방안			○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적정소득신고 유인방안		②			
3) 여성연금수급권의 수요 및 실효성제고방안			○		
4) 기초연금 도입방안		①			
5) 최저보증연금·기간산업제도 도입방안			○		
<b>2. 연금재정 안정화</b>					
1)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모형 개발			○		
2) 외국의 NDC제도 도입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3) 국민연금제도의 후생분석			○		
<b>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b>					
1) 해외연금 개혁동향		⑤		○	
2)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실적 및 설계방식연구			○		
3) 개인연금의 가입실태 조사 및 노후소득보장 확충방안			○		
4) 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및 분석					○
5) 연금관련 조세부과체계 개선방안				○	
6) 재직자 노령연금 개선방안			○		
7) 장애연금 개선방안			○		
8) 공사연금제도간 적용제외도입의 타당성 및 과급 효과에 관한 연구					○
<b>4. 연금 기금운영의 효율성제고</b>					
1)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조직의 평가				○	
2)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 평가			○		
3) 국민연금 기금운용(금융부문)의 성과평가		③	○	○	○
4)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설정		④			
5) 사회보장과 거시경제			○		
6)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효율성평가			○		
<b>5. 특수지역연금제도 개선</b>					
1) 특수지역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		
2) 다층소득보장체제로 특수지역연금 개편방안			○		
3)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의 연계방안				○	

## 기초보장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 빈곤양상의 변화 및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잔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수급기준의 엄격함 등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2000년 가구소비실태자료 분석결과, 약 4.3%추정), 근로빈곤층의 문제 심화, 이와 관련된 신빈곤문제의 등장,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요청강화 등 빈곤 관련 문제 및 제도적 대응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의 미흡

-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는 동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아, 운영 평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 실시 4년을 맞이하는 향후에는 운영평가와 함께 제도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공공부조 수급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자산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미흡

#### □ 빈곤문제와 관련된 기초자료의 부족

-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제도 설계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공공부조 제도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국민체감 미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실질적인 대상의 확대 및 급여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의 체감수준은 높지 않음.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등 제도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함.

## 2. 정책방향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망 강화
- 기초보장 관련 정책제안의 근간이 되는 자료의 생성
- 평가 등을 통한 기초보장제도의 집행 정확성 보증
- 수급자 중심의 기초보장 지향

## 3. 연구과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각지대 원인 분석 및 정책수단 기획
  - 비수급빈곤층을 포함하는 차상위계층의 실태 분석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별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선정기준으로서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보장 방안 연구

기초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틀 개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

□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방안 및 기초보장 모니터링 방안 연구
- 급여체계 개선방안

□ 공공부조 기초이론 및 비교 연구

- 공공부조의 환경으로서 가치정향에 대한 분석
- 기존의 연구에서 배제된 국가의 공공부조 체계 비교분석

□ 기초보장 관련 자료의 생성

- 정확한 정책대상의 규모 파악을 위한 차상위계층(기초보장 사각지대 포함) 및 기타 저소득층의 실태 분석
- 빈곤 관련 패널자료의 생성

□ 수요자 중심의 기초보장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 수요자 중심의 기초보장 및 자활 서비스가 되도록 사회복지사무소 등 인프라에 대한 제도 설계

□ 빈곤 양상 변화와 공공부조의 틀 재편방안

- 차상위빈곤층, 근로빈곤층의 실태 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제도의 확대 및 개선안 마련
- 의료, 주거, 교육 등 현물급여의 확대와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보장제도 설계
- 기초보장 방식으로서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과의 관계정립 방안 연구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합리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틀 개발		○			
	2. 참여복지 효과성 연구			○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효과성 분석			○		
	4.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			○	
	5.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방안		○			
	6. 자산조사 정확성 제고방안		○			
	7. 주거급여 개선방안	○				
사각 지대 제거	1. 사각지대 원인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2. 부양문화의 변화와 부양의무개념의 재검토			○		
	3.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방안		○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		
	5.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기초보장연구			○		
	6. 통일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방안					○
소득분배 정책 및 빈곤대책	1. 빈부격차 요인분석 및 빈곤대책 연구		○			
	2. 빈곤예방 및 대상자 특성별 빈곤대책		○			
	3. 차상위 계층 연구	○				
집행 정확성 제고	1. 기초보장제도 시행평가 및 활용방안	○	○			
	2. 기초보장 모니터링 체계의 실험 및 적용안		○			
	3. 기초보장 모니터링 체계 평가					○
기초 자료 생성	1.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2. 빈곤 패널자료의 생성 및 관리		○			
	3. 복지행정 DB의 체계 분석 및 개선안 모색		○			
수급자 중심의 제도운영	1. 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 합리화			○	○	○
	2.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실험 및 평가	○				
	3. 수요자 중심 복지모형			○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분석 및 직무개선 방안					○
기초 연구 강화	1. 공공부조 가치분석	○				
	2. 빈곤양상 변화와 공공부조 틀 개편방안				○	
	3.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공공부조 체계 국가비교	○				
	4. 의료, 주거, 교육 등 빈곤층에 대한 포괄적 보장제도 설계			○	○	○
	5. 근로활동유형변화에 대한 시계열 추적연구		○			
	6. 한국의 복지GNP추계와 국제비교					○
	7. 중장기 보건복지예산 적정규모 분석				○	

## 1. 현황과 문제점

### □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부재

- 실업·빈곤문제의 성격이 전통적 빈곤층에서 근로빈곤층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가족해체와 자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근로빈곤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 근로빈곤층에 대한 심층연구자료의 부족

- 그 동안 빈곤층과 실업자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실업과 빈곤문제가 중첩되어 작용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
- 그 결과, 공공부조제도를 포함한 각종 정책이 근로빈곤층의 취업과 빈곤탈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가 현재 자활사업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

### □ 자활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재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자활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노동시장 내의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 제도적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와 자활지원인프라 부족 등으로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자활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

## 2. 정책방향

- 자활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
-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활지원 확대
- 장기실업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중심의 자활사업 전달체계 구축
-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

## 3. 연구과제

### 단기 연구과제

-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2003~2004년도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법안 작성 및 세부 운영체계 개선안 마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수립
  -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복지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
  - 자활지원사업의 이원화된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근로빈곤층의 빈곤 및 탈빈곤 경로에 대한 심층 분석
  - 근로빈곤층의 빈곤원인과 탈빈곤 경로를 파악하여, 자활지원의 전략사업과 지원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논거 마련

### 장기 연구과제

-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수립
  -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공공부조제도의 중장기 안정화 방안 마련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에 대한 연구
  - 지속적인 근로빈곤층 패널조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이들의 취업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취업촉진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 4.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자활지원제도 내실화</b>					
1) 자활지원제도 개편방안	①				
2) 자활지원제도 신규 시행방안		○			
3) 공공부조제도 개편방안		○			
4)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도입방안			○		
<b>2.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b>					
1) 저소득층 취업실태 및 노동시장 동향분석	②				
2) 저소득층 직업능력 개발방안		○			
3) 저소득층 창업지원 모형 구축		○			
4) 저소득층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			
<b>3.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b>					
1) 사회적 일자리 창출모형 구축방안	③				
2)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			
3)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 실태분석			○		
<b>4. 자활사업 프로그램 평가</b>					
1) 자활근로사업의 효과성 분석		○			
2) 자활공동체 수익성 분석		○			
3) 재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b>5. 자활사업 전달체계 강화</b>					
1)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방안	④				
2) 지역중심의 자활사업지원체계 구축방안		○			
3) 자활대상자 초기상담-관리체계 구축방안		○			
<b>6. 근로빈곤층 패널조사(Panel Survey)</b>					
1)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확대	⑤	○	○	○	○
2)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 실태조사		○			



# 사회정책연구실 중장기 계획

## 1. 현황과 문제점

### □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 지속적인 출산율의 감소는 유소년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을 둔화시켜 미래 노동생산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8.7%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2030년에는 23.1%, 2050년에는 3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유소년, 경제활동가능인구 및 노인인구의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0~14세)		경제활동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04	48,199	9,633	20.0	34,396	71.4	4,171	8.7
2010	49,594	8,552	17.2	35,741	72.1	5,302	10.7
2020	50,650	7,034	13.9	35,948	71.0	7,667	15.1
2030	50,296	6,217	12.4	32,475	64.6	11,604	23.1
2040	48,204	5,522	11.5	28,149	58.4	14,533	30.2
2050	44,337	4,650	10.5	24,417	55.1	15,271	34.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사회·경제발전에 따르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결혼과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추진 되어왔던 가족계획사업에 의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저하되었음.
-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사회(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로 진입하는데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제특성도 변화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 특히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 질 것임.

〈표 2〉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국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의 도달 연도		소요년수
	7%	14%	
한국 <sup>1)</sup>	2000	2019	19년
일본 <sup>2)</sup>	1970	1995	25년
독일 <sup>2)</sup>	1930	1972	42년
스웨덴 <sup>2)</sup>	1890	1975	85년
미국 <sup>2)</sup>	1945	2014	69년
프랑스 <sup>2)</sup>	1865	1979	114년

자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2) JARC, Aging in Japan, 1998.

□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기능 약화

-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사회·경제·문화의 격동적 변환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가족은 기존의 가족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음.

〈표 3〉 가족형태별 가구수 추계(2004~2020)

(단위: 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	편부+자녀	편모+자녀	3세대 이상 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	기타가구
2004	2,102,968	7,353,601	238,459	988,775	1,165,586	2,589,453	160,276	939,625
2008	2,423,304	7,570,177	256,040	1,049,460	1,103,470	2,925,806	153,908	925,812
2012	2,748,151	7,681,229	271,180	1,093,684	1,029,082	3,258,267	147,272	916,050
2016	3,071,989	7,662,401	279,952	1,115,712	940,989	3,571,734	141,639	904,067
2020	3,429,225	7,536,925	283,686	1,124,937	851,836	3,897,152	135,964	898,381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혼의 증가와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는 재혼가족의 증가 및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의 대부분이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가족구성원 각 대상별로 분리·분산되어 가족이나 가정을 단위로 하는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함.
-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업가정, 가족해체 그리고 가정에서 유기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요보호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소년소녀가장 부양, 모부자가정 보호, 미혼모 보호, 노인·장애인 부양 등 사회적 부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와 함께 개방적인 성문화의 출현으로 증가하고 있는 혼외임신, 인공임신중절, 미혼모 문제 및 AIDS/STD 등 생식보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경제위기 이후 중산·서민층의 생활환경 악화 및 소외계층의 증대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간 소득분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산·서민층의 소득은 하향한 반면, 상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가계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이상계층과 서민층과 한계계층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미만계층의 소득수준 차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각종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산·서민층은 교육, 보건의료 및 주거 등 생활환경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제도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의 추구 등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요보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 제도 및 시설이 미흡하고

지원대상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수준도 낮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및 보건복지욕구 실태과악 미흡

- 최근 실업의 증가 등 인구·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행의 공공 및 민간조직과 인력으로는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보건과 복지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복지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이 요구됨.
- 최근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묘지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들이 제안·시행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국가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살아 있는 보건복지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음.

#### □ 통일에 대비한 보건복지분야의 준비 미흡

- 21세기에는 남북한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가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 남북한 인구전망, 탈북자대책,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비교 연구 등 통일에 대비한 보건복지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2. 정책방향

####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및 인구규

모의 급격한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의 지속발전을 추진함.

-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적정 인구 및 적정 출산율 유지를 위한 장단기 인구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행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마다 다양한 생활양식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해 추구하는 개인존중·인간중심의 사회를 건설함.

-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예방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인적자본의 육성과 잠재적 생산인력 활용을 위한 아동과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함.

－ 다양한 가족의 출현, 가족의 기능 변화 및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가족이 사회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게 함.

□ 연령·성·소득·장애·혼인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룩함으로써 사회통합 실현

－ 아동이 국가의 미래생산인력으로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개발에 적극 투자하도록 함.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서적·인지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건설함.
- 요보호아동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뿐만 아니라 요보호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반아동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함.

－ 노인인구의 규모와 특성 변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의 수행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을 누리는 사회를 건설함.

- 재취업·창업·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이 적극 활용되고 건강이 유지되며 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함.

－ 장애인과 여성이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뜻하지 않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장애

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기회를 알선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로 건강한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사회를 건설함.

-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자녀양육 및 가족원 보호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서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긍지를 지켜주는 사회를 건설함.

- 미혼, 유배우, 이혼 및 별거, 사별 등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별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안정을 도모함.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욕구에 부응함.

-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조하여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
- 참여복지 기조하에서 보건과 복지가 상호 연계되는 정책개발과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함.
-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중심의 복지행정업무의 체계화 및 행정전산화를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함.

### 3. 연구과제 및 우선순위

사회정책연구실/신인구정책개발팀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임.

복지사회 구현

- 인구 및 가족변화의 지속적인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안 강구
- 요보호아동·노인·장애인·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노인 및 장애인 가족부양과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 연구

- 국민의 보건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차별없는 사회 실현

-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연구
  - 소득보장, 보건·의료, 창업 및 취업,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에 관한 연구 수행

□ 복지자원 및 체계적인 복지행정체계 구축방안 강구

-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의 확보, 전산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 복지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차원의 노력과 이에 따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 통일에 대비하고, 정보화, 지방화 등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

## 인구가족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구증가 억제의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증가 및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하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속적인 저출산은 인구규모를 감소시키고 인구구조를 이상적 형태로 변화시켜 노동인력의 감소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보장비의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1〉 합계출산율<sup>1)</sup>의 변화추이

(단위: 명)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출산율	4.53	3.47	2.83	1.67	1.59	1.65	1.47	1.42	1.47	1.30	1.17	1.19

주: 1) 여성1인이 가임기간동안 갖게 될 평균출생아수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2.

- 국민소득수준 1만불 시대 진입한 이후 소득수준의 지속적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수준 및 국민의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는 가속화되고 있음.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대되면서 가족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공유시간이 감소하고 가사노동의 분담 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성매매와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요보호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표 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변동 추이

(단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경제활동참가율	39.3	40.4	42.8	41.9	47.0	48.4	48.6	49.2	49.7	48.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통계연보』, 2003.

□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및 경제위기 이후 가계형편의 악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혼가정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이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혼 후 자녀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자녀양육책임 부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 자녀에 대한 지원책 또한 정부의 부담으로 남고 있음.

〈표 3〉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의 변화추이

(단위: 건)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조혼인율	9.2	8.0	10.6	9.2	9.3	8.7	7.0	6.7	6.4
조이혼율	0.4	0.5	0.6	1.0	1.1	1.5	2.5	2.8	3.0

주: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조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2.

□ 결혼관의 변화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등 새로운 가족생활방식을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출현하고 있음.

－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어 가족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집행중인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개별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개별 제도간 또는 관계 법령간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

## 2. 정책방향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함.
  - 인구구조 및 인구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인구정책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함.
    - 인구변동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의 강구 및 인공임신중절 방지, 출생성비 균형유지 등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함.
- 가족생활변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 및 지원방안을 강구함.
  - 종전의 보편적 가족형태를 포함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약화된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가족복지 증진대책을 강구함.
    -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 가족부양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도록 함.
    -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 중, 사이버문화의 확산이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함.
  - 산재되어 있는 가족관련 각종 지원정책 및 제도를 통합·조정하여 효율적인 가족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함.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강화와 동시에 아동이 속한 가족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반을 마련함.
  -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에 대한 건강한 성장환경 제공을 통한 빈곤의 세습을 막고 건강한 국가 생산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요보호아동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함.
    -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보호를 포함하여 입양제도와 가정위탁제도 등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함.
  -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증진방안을 강구함.
- 여성인력의 자질향상과 인력활용을 극대화하고 취약계층의 여성의 삶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등 여성관련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피해여성 및 잠재적 피해여성에게 대한 보호와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참여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녀양육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함.
  - 빈곤여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복지자원 동원 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통한 종합발전방안 마련
  -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체계 구축
  - 민간복지자원 개발, 동원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마련
- 2005년부터 시행되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가족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져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평가가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의 개발하고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함.

### 3. 연구과제

#### □ 가족복지 관련 연구과제

-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전국 실태자료의 생산 및 분석함.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실태파악 및 가족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제반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족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가족문제 현안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차원의 노력과 이에 따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
  - 중년남성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과 역할 간의 갈등 분석을 통한 향후 남성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모색

#### □ 인구정책 관련 연구과제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적정 인구와 적정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인구정책을 개발함.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산율 및 모자보건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함.

□ 아동정책 관련 연구과제

- 여성경제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육환경에 전반에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아동보호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함.
-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아동권리 현황 및 권리증진방안을 연구함.

□ 여성정책 관련 연구과제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여성관련 복지정책 전반의 연계성을 평가하여 여성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함.
  - 여성관련 폭력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성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가족친화적 정책 수립을 통한 여성인력의 활용 활성화, 일과 가정의 양립방안 수립.
- 여성빈곤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빈곤여성의 자활·자립을 방안을 도모함.

□ 사회복지시설 관련 과제

- 개인운영시설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전략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방안 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4. 연차별 연구과제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 가족복지 분야</b>					
1.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지원체계 구축방안	○				
2. 가족실태조사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방안		○			
3. 가족의 환경변화 실태와 정책방안			○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효율화 방안				○	
5. 중년기 남성의 사회·가족에서 역할 및 갈등연구					○
<b>□ 인구정책 분야</b>					
1.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2. 저출산시대의 신인구정책 개발 및 추진방안		○			
3. 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		
4. 최근 출산율의 동향 및 안정화방안연구 (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심층분석)				○	
5. 적정인구규모의 추정과 적정출산율 유지방안					○
<b>□ 아동복지 분야</b>					
1. 여성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				
2.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			
3. 빈곤아동 복지증진 방안연구			○		
4. 아동권리 현황과 발전방안				○	
5. 요보호아동 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
<b>□ 여성복지 분야</b>					
1.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				
2. 빈곤 여성가구주를 위한 노동-가족정책 연계방안		○			
3. 기혼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연구			○		
<b>□ 사회복지시설 분야</b>					
1. 개인운영시설의 체계적 지원방안	○				
2. 복권기금사업 평가	○	○	○	○	○
3. 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수립		○			

## 1.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2000년 1,449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로 추정되고 있음.
  - 이들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및 만성질환에 의한 장애 등 후천적 장애비율은 1985년 81.2%에서 2000년 89.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3. 12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454,215명으로 이는 전체 추정장애인(1,449,5000)의 100.3%이며, 이 중 1·2급의 중증장애인은 29.3%임.
  - 2000년에 장애범주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로 확대되고,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확대되어 계속해서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상호간 우선순위와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공급자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실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 생활안정정책 대상이 주로 중증장애인(1·2급)과 일정 자산수준 이하인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지원수준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중증 장애인 유료도우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은 무의무탁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교육·훈련 및 치료 프로그램의 부족,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지역사회에 대한 시설의 폐쇄성, 이용시설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등 재활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재활을 돕기 위하여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생활시설의 중간시설로서 그룹홈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장애인재가복지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재활사업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정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설치자금의 부족 등으로 획기적인 개선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기설치시설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부족하거나 연계시설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의 지속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도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애인 PC 보급 및 교육을 통한 장애인 정보화 활동 육성방안을 모색함.
  
- 특히 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수립 및 추진이 미흡함.
  - 이에 따라 장애인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 창업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급격하게 장애인구가 확대될 것이며, 이들의 복지욕구 또한 다양화하고 고도화될 것임.
  -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기초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아울러 장애범주의 확



대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방향

□ 21세기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임.

- 각종 질병과 재해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천적·후천적 장애발생을 방지하는 장애예방에 주력하여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함.
- 근로능력에 따른 장애인복지 정책 강화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근로동기 부여,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근로능력 향상,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장애인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사회연대감을 제고하여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함.
-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
  -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가를 촉진하고,
  - 정보 접근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조성함.

## 3. 연구과제

□ 이러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하에서 개발한 연구과제는 별표 연차별 정책과제 추진계획에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써 장애아동보호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유료도우미제도도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행·재정적인 지원강화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장애인 복지사업의 평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수용시설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다음해에 그룹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재가복지서비스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필요하며, 무의무탁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임.
-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구조 개선,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것임.
- 장애인 편의시설은 2004년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5년에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4. 연차별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input type="checkbox"/> 장애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초자료 생산					
1. 3차 장애범주 확대방안			○		
2.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①			
3. 장애 관련법 장애등급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4. 지역별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				○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정책					
1. 장애연금의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				
2. 장애수당 수급자 및 수급액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자립지원정책					
1.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				○	
2. 의료재활					
1) 지역사회재활의료서비스 확대방안					○
3. 교육재활					
1)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
4. 직업재활					
1) 민간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3) 장애인 창업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및 개선방안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1. 장애인생활시설					
1) 장애인생활시설 평가시행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2) 생활시설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위한 연구					○
2. 지역사회재활시설					
1) 지역사회재활시설 평가시행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③			
2) 지역사회재활시설 위탁경영과 직접경영의 장·단점 비교 연구			○		
3)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간 불균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⑥			
4)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정립 방안연구		⑦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②			
4. 그룹홈					
1) 그룹홈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2) 그룹홈 평가제도시행과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3) 그룹홈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5.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확대					
1)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도모에 관한 연구			○		
2) 재활보조기구의 유통-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정책					
1. 장애인편의시설					
1) 공공 및 민간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		④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3. 장애인 정보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 노인복지분야

### 1. 현황과 문제점

- 고령사회 대책마련 시급: 2004년 현재 노인인구는 4,17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이며,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9년 소요) 노인인구의 제특성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적절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음.
-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표 1〉 노인인구의 변동추이

(단위: 천명,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2019	2020
전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5,985	48,199	50,618	50,650
65세이상 노인인구	726 (2.9)	991 (3.1)	1,456 (3.8)	2,195 (5.1)	3,372 (7.3)	4,171 (8.7)	7,314 (14.4)	7,667 (15.1)

자료: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표 2〉 인구노령화지수의 국제비교(2000년 현재)

	한국(2004년)	싱가포르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8.7	7.2	17.2	12.5	16.4	17.4
노령화지수	43.3	32.4	117.6	58.1	105.8	95.6

주: 노령화지수=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자료: UN 1998,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2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 통계청

#### □ 소득보장

- 노인의 약 3/4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기존의 노령

계층 소득보장정책(기초보장제도,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98년 경로연금제의 도입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급대상이 한정되고 지급액이 낮아(노인인구의 18.9%에게 3.5~5만원 지급)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1933년 7월 1일 이후 출생 노인들의 연금가입 저조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출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에 따른 경로연금의 제도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 노인취업

- 장·노년층의 건강 및 교육 수준은 향상되어 장년 및 저연령 노인의 생산 활동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장년층, 저연령 노년층의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 유도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 노인취업알선 기관의 경우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이 낮은 상태이며, 청년층 일자리와 중첩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Community Business, Community Job)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 건강한 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노인들은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부족과 여건의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함.
- 고학력 증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개발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그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 고령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확립이 요구됨. 현재 2007년 도입을 목표로 실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표 3〉 거동불편 노인 현황

(단위: 명)

연도	시설			재가				
	최중증	중증	합계	최중증	중증	경증	(경증)치매	합계
2003	22,573	55,265	77,837	22,504	102,797	197,656	195,672	518,629
2007	26,781	65,566	92,347	27,171	124,113	238,642	236,242	626,171
2010	29,388	71,950	101,338	30,062	137,322	264,040	261,389	692,812
2020	41,480	101,554	143,033	43,472	198,575	381,817	377,983	1,001,847

## 2. 연구방향

노인의 4대 고통(빈곤, 질병, 소외감, 무위)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관련 기초자료 및 정보 생산

-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등 전국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노인복지정책이 계획·수립될 수 있도록 함.
- 횡단적 자료뿐만 아니라 종단적 자료의 확보 및 지역단위 통계자료 생산 등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

- 개별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대안 선택

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 개별 노인보건복지관련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노인복지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함.

#### □ 정책연구

- 현재 수행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정립, 노인일자리 창출, 여가활동, 장기요양보장체계의 정립과 관련된 연구의 구체성 심화 뿐만 아니라, 노년기 자원봉사, 평생교육, 노인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로 연구범위의 확대를 지향함.
-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정립: 노인의 소득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파악과 현재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노인의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구축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건강한 노인계층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이 보다 적극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창업과 각종 사회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순 지원 위주의 복지에서 탈피하여 생산적인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함.
- 장기요양체계의 확립: 고령자에게 흔히 발생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생활기능상의 장애를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장치의 마련을 위해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더불어 예방적 측면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3. 연구과제

#### □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 '재가노인조사' 실시(1년차) → '조사자료 심층분석' → '시설거주노인조사' 실시(3년



차) → ‘중장기 계획마련’(4년차)의 과정으로 4년 주기로 조사 및 중장기계획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

- 지역복지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적절성을 지역복지의 맥락에서 평가
- 부처간에 산재된 노인복지관련 정책의 연계성 평가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함.
- 개별 노인보건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 정책연구

#####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정립]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과 같은 정책현안 이슈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후
- 빈곤실태의 변화 추이와 같은 기초연구에 기반하여 적절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생산적 노인복지 기반의 조성]

- 노인일거리 창출 및 보급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여 제고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속에서 노인의 취업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적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노인 근로유인장치의 마련 방안”을 검토함.

##### [장기요양보호체계의 확립]

- 장기요양보장체계의 도입 이전까지는 이를 위하여 요구되는 평가판정 및 수

가개발,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시범사업 모형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 장기요양보장체계의 도입 이후에는 제도의 장단점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연구를 실시함.
- 예방을 통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 대상 규모의 축소를 가능케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요양보장제도 내 통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사회 및 여가활동]

-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세대간 통합이 가능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연구를 수행하며
-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평생교육사회로의 원활한 도입을 추구함.
- 2004년부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국고보조 이후 3년간의 실적에 기초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

####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주거 및 생활환경을 노인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선진국의 노인친화적 환경 조성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주거복지정책발전방향을 제시한 후 그에 기초하여 “지역복지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실시하도록 함.
- 노인의 제특성 변화를 반영하며 욕구충족도를 높힐 수 있는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버산업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영역별로 제시하는 연속연구를 실시함.

#### 4. 연차별 정책과제 추진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input type="checkbox"/>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고령사회 대책마련					
1. 지역사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2. 지역사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심층분석		○			
3. 장기입소노인시설 거주노인주사			○		
4. 노인보건복지정책의 발전방안				○	
5 노인관련 패널 조사					○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					
1.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평가					
1) 평가틀 개발			○		
2)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평가				○	
2. 부처간 노인복지정책의 연계성 검토		○			
3.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					
1) 노인인력지원기관	○				○
2) 재가노인복지시설 평가틀 개편 및 평가		○			
3) 노인복지회관 평가틀 개편 및 평가		○			
4) 장기입소시설 평가틀 개편 및 평가			○		
<input type="checkbox"/> 개별 정책연구					
I. 노인소득보장체계의 정립					
1. 노인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				
2. 교통비 제도 개편 방안	○				
3. 노인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분석				○	
4. 노인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안					○
II. 노인취업					
1. 노인일거리 창출		○	○		
2. 노인 근로유인장치 개발방안				○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Ⅲ. 건강관련 서비스</b>					
1. 장기요양보장제도 구축					
1) 평가판정 및 수가개발	○				
2)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			
3) 시범사업 모형 개발		○			
4) 시범사업 수행 및 평가			○	○	
5)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제도 점검 및 평가					○
2.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3. 노인의료비 증가요인 분석 및 적정화 방안 <sup>1)</sup>	○				
<b>Ⅳ.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b>					
1.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2. 지역단위에서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방안			○		
3.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과 서비스 증진방안				○	
<b>Ⅴ.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b>					
1. 주거 및 생활환경					
1) 선진국의 복지정책비교를 통한 노인친화적 환경조성 방안			○		
2)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
2. 실버산업: 영역별 실버산업 발전방향		○	○	○	

주: 1) 보건정책연구팀에서 '고령화와 의료비간의 상호관계분석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연구 수행중

## 정보통계연구센터 증장기 계획

### 1.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미흡으로 조직간 시스템 통합 활용 및 업무간 시스템 연계가 부족함.
  - 정보기술 및 보건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보화 추진계획 이(국민복지망기본계획연구, 1994 포스테이타) 미흡하고, 조직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추진 전략이 부재함(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분석, 1998, 한국전산원).
- 보건복지 정보표준화의 미흡으로 정보의 공동활용이 어려움.
  - 통합된 표준화기구의 부재로 표준화의 범위 및 기관별 요구수준의 반영이 미흡하고 표준화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서식 표준화에 국한됨.
  - 기관별 보유중인 분야별 시스템 연계방안과 보유중인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방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운영중인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의 사업개선을 위한 사후평가가 미흡함.
  - 기 수행된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이 지식정보화의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제대로 추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평가가 요구됨.
  - 사업평가를 수행한 정보화사업의 경우, 평가를 통해 요구된 개선점의 반영 및 재강화, 필요사항 등의 보완 등이 미흡함.
- 다양한 조사사업으로 생산된 보건복지통계의 접근성이 낮음.
  - 다양한 조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통계정보의 접근성이 부재함.

## 2. 정책방향

- 보건복지 통계정보의 다양한 검색 서비스 제공
  -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생산통계의 DB를 구축함과 동시에 데이터분석의 용이성 극복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함.
  - 구축된 DB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대민서비스를 실시함.
  
- 분야별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의 재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의 수립과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
  - 분야별 업무프로세서를 재 설계하여 업무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분야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관련기관의 명확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함.
  
- 정보공동활용 및 표준화 방안을 마련함.
  - 보건복지 관련정보의 효율적 구축과 공동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과 정보의 생성·유통에 관련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함.
  - 부처별 분산된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함.
  
- 과학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 기반의 구축
  - 통계생산 및 관리, 제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건복지통계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통계생산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
  - 기존의 보고와 조사통계의 개선을 통한 보다 양질의 통계생산방안을 모색
  
- 보건복지 관련 통계생산의 활성화 및 주기적인 생산체계 구축
  - 시계열 자료의 구축을 통한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인 조사 필요통계의 파악 및 생산방안 마련 및 생산을 위한 연구 수행
  - 관련 사업 추진시 통계생산을 위한 예산확보 및 통계생산을 위한 자료확보의 용이성 확보방안 모색

-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를 확대시킴.
  - 생산통계의 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통계의 집중관리 방안 마련 및 정보통계 DB와 연계 활용 방안 강구함.
  - OECD 요구 보건통계의 제출률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국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강구함.

### 3. 연구과제 및 우선순위

통계전산센터는 지식기반 보건복지 정보화 그리고 통계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제공을 위해서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효율적이고 주기적인 통계생산 방안 강구, 정보의 공동활용, 사업의 평가, 전략계획 수립, 정보서비스 및 활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함.

- 필요통계의 주기적인 생산방안
- 보건복지 정보공동 활용
- 공공보건복지 정보화 사업 평가
-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조사자료 생산통계의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통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 강구 및 교류 확대

## 전산개발분야

### 1.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 생산통계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미흡
  - 통계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 생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

□ 보건복지 정보표준화 미흡으로 정보공동활용 어려움.

-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한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부처간, 기관간 정보 공동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
- 단일의 비 전문기관에서 보건복지정보 표준화가 추진되어 표준화의 범위 및 요구량 반영이 미흡하고 표준화의 내용이 행정업무에 편중
- 부처간, 기관간 정보공유를 기피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사회적 여건 미성숙

## 2. 정책방향

□ 보건복지 통계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검색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 생산통계의 DB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분석의 용이성 극복을 위한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구축된 DB를 근거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통계정보의 대민서비스 실시

□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분야별 정보화 사업 평가

-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건복지 정보화 전략계획의 재수립
- 정보화 사업의 업무개선 및 재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후평가

□ 정보공동활용 및 표준화 방안 강구

- 보건복지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공동활용마련
- 정보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대안 마련
- 여러 전문가 및 분야별 합의에 따른 표준화 방안 마련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보건복지 통계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구축</b>					
1) 보고통계시스템 활용방안 연구		○			
2) 보건복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	○	○	○
<b>2. 보건복지정보화 사업평가 및 전략계획 수립</b>					
1) 공공보건복지의료 정보화 사업평가		○	○	○	○
2) 공공보건복지정보화 전략계획 재수립			○	○	○
<b>3. 보건복지정보 공동활용 및 표준화</b>					
1) 4대 사회보험 정보 공동활용 방안			○		
2) 보건복지 관련 정보의 중복생산 현황 파악 및 공동활용 방안			○		
3) 장기이식정보의 서식 표준화 연구		○			
4) 전자의무기록자료의 활용방안 연구			○		
<b>4. 보건복지 정보관리체계 구축</b>					
1) 암환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2) 장애인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

## 1. 현황 및 문제점

### □ 통계생산기반의 취약

- 통계의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통계생산의 확대 및 질적 관리를 꾀하기가 어렵고 당면한 문제해결만 급급한 실정임.
- 통계생산을 위한 관련 제도 및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인 자료 생산 및 축적이 어려운 실정임.
- 지자체의 실시로 지역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 및 제공하는 조직 및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필요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통계생산의 저조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후 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아직 까지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이 저조하고, 기본적인 통계도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필요통계의 생산 부진은 부정확한 통계에 의한 정책수립 및 추진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통계생산은 통계생산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어려워 자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통계 생산이 어려움.

### □ 생산통계의 활용성 미흡

- 통계의 산발적인 생산 및 관리는 자료의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생산 가능 통계의 범주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통계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수요자들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이 어려워 산출된 통계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함.

□ 국제기관과의 통계교류 미흡

- 생산통계를 적기에 국제기관에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추계에 의한 통계의 사용으로 국가에 불리한 부정확한 평가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발생
- 국제기관과의 통계생산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류의 부진할 뿐만 아니라 요구 통계의 제출률도 아직도 저조한 실정임.

## 2. 정책방향

□ 보건복지 통계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통계생산 체계 구축

- 보건복지 통계생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족한 조직 및 인력의 보강 그리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통계생산을 위해 관련 조직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 관련 통계생산의 활성화

- 보건복지관련 통계항목의 체계적 정리 및 생산방안 그리고 방법론의 개발 등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방안의 마련
- 지자체의 필요 통계 충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생산 협조체계 구축,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다각적인 생산방안 모색

□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

-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 일반시민이 생산통계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효율적인 제공방안 마련을 통한 생산통계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강구
- 통계생산기술의 발전과 생산된 통계의 상호비교를 위한 국제기관 및 외국과의 통계생산 정보 및 생산통계의 교류 확대

□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생산통계의 제공

- 생산된 통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정보통계 DB와 연계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 3. 연구계획

과 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b>1. 통계생산 기반 구축</b>					
1) 보건복지통계 생산의 활성화 방안		○	○		
2) 환자조사 설계(조사표 및 표본)		○			○
3) 보고통계의 개편방안 연구			○		
4) 질병통계생산방안 연구				○	
5) 보건계정 구축에 관한 연구	○		○		
6) 복지계정 구축에 관한 연구				○	○
7) 보건통계생산을 위한 관련자료의 집중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		
8)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산활성화 방안 연구				○	
9) 지역단위 복지통계 생산활성화 방안 연구		○			
<b>2. 의료이용, 질병 등 보건관련 지표생산</b>					
1) 의료보험자료를 이용한 통계 생산방안					○
2) 의료이용실태분석			○		
3) 보건자원실태조사(인력, 시설, 장비 등)		○			
<b>3. 지역단위 정부재정, 종교복지 등 복지관련 통계생산</b>					
1) 지역단위 복지고유사업 규모조사		○		○	
2) 종교복지 규모조사	○		○		○
<b>4.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b>					
1) 보건복지지표개발				○	
2) 보건복지통계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b>5. 국제기관과의 통계교류 확대</b>					
1) OECD 요구 보건통계생산	○	○	○	○	○
2) OECD 기준에 따른 사회보장비 추계	○		○		○
3) OECD 기준에 따른 순사회보장비 추계		○		○	